



3면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전주매일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음 2월 21일) 제39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상용차 산업 경쟁력 강화 후 임시운행허가 특례 도입

도,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읍선 선택 확대 · 납기 단축... 소비자 편의 개선 분업형 생산체계 구축...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반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상용차·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성장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가 새롭게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에 특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완성차 상태에서에서만 임시운행이 가능했지만, 앞

로는 기본 제작을 마친 차량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외부 협력사로 이동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최대 40일 이내이며, 허가 목적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 운행이 가능하다.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부여되며,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재함·특장장비 장착이 필요한 상용차 생산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공정 대기과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읍선 선택 폭 확대와 납기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상용차·특장차 산업이 집적된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반

영한 것으로 출고 전 특수장비 설치 수요와 친환경 상용차 확대에 따른 외부 협력공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를 통해 완성차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업 생산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용차 산업의 전동화·특장화 전환과 부품기업의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임시운행허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내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특례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생산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한 제도"라며 "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전북대학교 피지컬AI 현장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 피지컬AI 기반 제조혁신 실증 성과 공유

박영선 전 중기부장관, 전북대 PoC 참여기업 DH오토리드 방문 도, 전북 AX 본사업 비롯 피지컬 AI 기술 산업 현장 적용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전북대학교 창조2관과 PoC(기술검증) 참여기업 DH오토리드에서 피지컬AI 기반 제조혁신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방문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학교 실증랩과 PoC 참여기업의 현장실을 직접 둘러보며 기술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전북대 실증랩에서 2025년 산업특화형 PoC 사업의 주요 성과 보고와 실증 시연을 통해 제조·

물류 분야의 AI 공정 적용 현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이후 DH오토리드를 찾아 실제 생산라인에 구현된 자동화 기술의 성과를 청취하고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전북 AX 본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의 토대가 된 피지컬AI 사전검증(PoC)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399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전북대학교가 주관을 맡고 KAIST, 성균관대, 캠퍼스융합기술원이 참여했으며, DH오토리드·동해금속·대승정밀 등 3개 실증기업이 함께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학교에는 제조 분야 실증랩이, KAIST에는 물류

분야 실증랩이 각각 구축됐다. 수요기업의 생산공정에 피지컬AI 기술을 접목해 제조·물류 현장 중심의 AI 기반 자동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는 평가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피지컬AI 전북 AX 본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본사업은 제조공장 특화 이중(異種) 로봇 협업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핵심 과제로 삼아, AI 다크팩토리(무인공장) 구현과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오는 6월 착수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현장 방문은 피지컬AI 실증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확산의 방향을 가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전검증에서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전북을 대한민국 피지컬AI 제조혁신의 중심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중기부 '4월 동행축제' 전주서 '쌍파르'

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북대 대학로 · 전주실내체육관서 전국 개막행사 전주서 단독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비촉진 행사인 '2026 4월 동행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전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020년 축제 시작 이후 전국 단위 개막행사가 전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2026 4월 동행축제'의 개막 특별행사가 11~12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대학로와 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전국 단위 소비촉진 행사다.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축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주에서 전국 개막행사가 단독으로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개막행사는 전시·판매전과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북대학교 대학로 일대에서는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과 함께 캡슐 뽑기,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말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6시부터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공식 개막식과 '상생 콘서트'가 열린다. 가수 멜로망스와 육상달빛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축제 취지에 맞춰 현장 판매장에서 1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 3100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문화행사와 소비 촉진을 연계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전북 주요 지역축제와 연계한 행사도 전역에서 이어진다. 전주 이팝나무축제, 남원 춘향제, 익산 서동축제, 임삼햇스타, 고창 청보리밭 축제 등 총 7개 지역행사와 연계해 지역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올해 첫 동행축제의 문을 전주에서 열게 돼 매우 뜻깊다"며 "도민들이 전북 곳곳의 매력적인 축제 현장을 찾아 로컬 여행의 즐거움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상생의 가치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재단, 주권재민 원리 · 평등 이념 등 수록 필요성 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이 제출한 개헌 논의에 공감함을 표하면서도, 헌법 전문에 부미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오랫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동학농민혁명 역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신분 질서를 넘어 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역사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 원리를 분명히 보여준 민중 헌법

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신분제 타파와 인간 존중 사상 등 동학농민혁명이 담고 있는 보편적 인권 가치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 정신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